

방역체계 '구멍'... 붉은불개미 대량 발견, AI 항원 검출

안산·인천서 '붉은불개미' 발견
"유출 가능성은 낮아" 긴급방제

경남 창녕에서는 AI 항원 검출
장척저수지·철새도래지 우포늪
각각 방역 차량 배치 '긴급방역'



8일 오후 붉은불개미가 대량 발견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스팀청소기 전문 제작 업체 물류창고 컨테이너에서 관계자가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생태계교란종 '붉은불개미'가 무더기로 발견되고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 항원이 검출되는 등 곳곳에서 정부 방역체계가 풀리고 있는 모습이다.

9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8일 국내 유명 스팀청소기 제작 업체의 안산 물류창고 내 컨테이너 안에서 붉은불개미 5천900여 마리가 발견돼 검역 당국이 긴급 방제에 나섰다. 이 컨테이너가 27일간 적치돼 있던 인

전항에서도 같은 종으로 추정되는 개체가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붉은불개미는 세계자연보호연맹(IUCN)이 지정한 세계 100대 악성 침입 외래종에 속하는 해충이다. 지난해 9월 부산항 감만부두에서 국내 최초로 발견된 이래 여덟 번째다.

붉은불개미에 물리더라도 그 독성은 꿀벌과 비슷한 수준으로, 영향은 있지만 일각의 우려와는 달리 치명적인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환경부 관계자는 "개체 샘플을 채취해 검사한 결과 붉은불개미로 확인됐다"며 "여왕개미를 찾고 있으나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며 "컨테이너 내부에서 개체가 발견된 점으로 미뤄 물류창고 밖으로 유출됐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붉은불개미는 A사가 중국에서 OEM 방식으로 제작해 들여온 무선청소기를 적재한 컨테이너 내부에서 발견됐다.

이 컨테이너는 지난달 8일 중국 광둥성에서 출발해 같은 달 11일 오후 인천항에 도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이날 오전 5시 50분 안산 물류창고로 반출될 때까지 약 27일간 인천항에 적치돼 있었다.

검역본부는 이날 오후 이 컨테이너가 적치돼 있던 인천항 내 한진컨테이너터미널 바닥을 조사하던 중 붉은불개미 30여마리를 추가로 발견하기도 했다.

검역당국은 인천항에서도 긴급방역작업을 벌이고 있다.

한편, 경남 창녕에서는 야생조류 분변에서 AI 항원이 검출돼 방역당국을 긴장

시키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창녕군 장척저수지 근처 농경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 검사결과 H5형 AI 항원이 검출됨에 따라 지난 7일부터 지자체와 군이 긴급 방역을 진행 중이다.

군은 AI 항원이 검출된 장척저수지와 철새도래지 우포늪 주위에 각각 방역 차량 3대를 배치했다. 우포늪은 장척저수지에서 10km 이상 떨어졌지만 장척저수지보다 철새 숫자가 훨씬 많은 점을 고려, 만일에 대비해 방역을 함께 하고 있다.

군은 또 가금류 사육 농가 진입로에 생석회를 살포하고, 철새도래지 출입 차량 소독을 위한 발판 소독조 구성, 출입 제한 경고판 설치 등의 조치를 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겨울 철새의 국내 도래가 확인됨에 따라 지난 2일 철새 도래 경보를 발령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metroseoul.co.kr

MB, 항소포기?... 정치보복 구도로 가나

1심서 징역 15년형 선고받아
내일까지 항소여부 결정할 듯



110억원대 뇌물수수과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5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법원이 '다스 실소유주'로 판단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갈림길에 섰다. 항소를 포기하면 '보복 정치' 프레임이 가져갈 수 있지만, 다스는 본인 소유임을 자인하게 된다. 항소할 경우, 직권남용 무죄처럼 일부 유리한 1심 판단마저 뒤집힐 수 있다.

지난 5일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 받은 이 전 대통령은 11일까지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항소는 재판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검찰은 이미 항소 계획을 밝힌 상태다. 이에 따라 2심 재판은 이 전 대통령 항소 여부에 관계 없이 열린다.

일각에선 이 전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재판 포기후 '정치 보복' 구도를 이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구속 단계부터 자신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정치 보복으로 규정해왔다.

문제는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전 대통령이 항소를 포기할 경우, 자신을 다스 실소유주로 결론 낸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인정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

이 전 대통령은 2007년 11월~2011년 11월 삼성으로부터 다스 미국 소송 비용으로 64억2376만7383원을 지원 받은 혐의 등 16개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2003년 5월부터

김경준 BBK 대표를 상대로 다스의 미회수 투자금 140억원을 반환하는 민사소송을 시작했다. 2008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변호사 김재수 씨를 LA 총영사에 얹혀 소송을 지원케 했다며 그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이 전 대통령 취임 이전 부분인 3억5025만원만 무죄로 보고, 재입 중 지원받은 나머지 금액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설립에 적극 관여하고, 가족과 주요 경영권을 행사한 점 등을 근거로 그를 다스의 실소유주로 판단했다.

직권남용 혐의 무죄 판단도 항소를 고민케 하는 대목이다. 1심은 이 전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해 김재수 변호사를 LA

총영사직에 얹혀 다스 미국 소송을 지원케 한 혐의 등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죄를 적용하려면 해당 지시가 대통령의 직무권한에 있어야 하는데, 다스 소송 지원은 대통령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가 될 수 있어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2심 재판부가 이 전 대통령의 직무 권한 범위를 넓게 해석할 경우, 직권남용 혐의가 유죄로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 앞서 서울고법 제4형사부(김문석 부장판사)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KT 인사 관여, 현대차의 플레이그라운드 광고 발주 등을 '대통령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 일 뿐, 직권 남용이 아니라고 보고 강요죄만 인정했다.

반면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공무원 사직과 각종 지원 사업 배제 부분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는 유죄 또는 일부 유죄 판결했다. 박 전 대통령이 전경련과 기업체로 하여금 미르재단에 486억원, 케이스포츠재단에 288억원을 출연케 한 점도 직권남용으로 인정했다.

한편, 지난 5일 '화이트 리스트'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국경제인연합회 보수단체 지원이 직무 밖이라는 이유로 직권남용 무죄, 강요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를 두고, 법원의 직권남용 해석이 점차 좁아져 관련 혐의 유죄 입증에 어려워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법종 기자 joker@

소규모 건설현장 추락방지시설 예산 확대

노동부, 작년 추락사 275명
내년 예산 331억원 편성키로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추락재해(떨어짐)로부터 작업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2019년 소규모(20억 미만) 건설현장에 대한 추락방지시설 설치비용 지원예산을 대폭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추락재해는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작년의 경우 전체 산업현장 사고사망자의 52%(506명)가 건설업에서 발생했고, 이 중 54%(275명)가 추락으로 인한 사망사고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정부 지원을 통해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한 건설현장의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은 현장보다 추락재해가 약 2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3년 이후 정부로부터 추락방지 시설비용을 지원받은 건설현장에서 추락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단 한 건도 발

생하지 않고 있어, 소규모 건설현장 작업 노동자를 보호하고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안전시설 설치 지원 필요성은 더욱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올해 예산을 38억 증액한 데 이어 내년에는 추가로 93억원을 증액해 331억원의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건설현장의 사업 참여 기회가 더욱 확대돼 약 1100여 개소 이상의 소규모 건설현장이 추가로 정부지원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영만 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산업현장의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추락사고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내년도 추락방지시설 설치지원 예산이 대폭 확대된 만큼 적극적으로 비용지원을 신청해 노동자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게 되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세종=최신용 기자

경찰시설 10곳 중 2곳 여경 샤워실 없다

화장실 없는 곳 179곳 달해

전국 경찰시설 10곳 중 2곳은 여경 샤워 시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이 9일 경찰청 자료를 확인한 결과, 경찰청과 지방청 등 전국 2234개 경찰 건물 중 498곳에 여경 샤워실이 없었다고 밝혔다.

여경 화장실이 없는 곳은 179곳에 달했다.

현재 여경이 근무하는 서울 지역 지구대(파출소)는 230곳이다. 이 가운데 남성 시설은 있지만 여경 샤워 시설이 없는 곳이 48곳, 화장실이 없는 곳도 6곳으로 나타났다.

경남은 157개 지구대(파출소) 중 109곳에서 여경이 근무하지만, 33곳이 여경 샤워 시설을 갖추지 않았다.

충북은 여경이 근무하는 곳이 58곳이지만, 휴게시간에 수면을 취할 수 있는 여

성 당직실이 없는 곳이 4군데였다.

여경이 37%인 경찰청의 경우 남성 목욕탕은 3개인 반면, 여성 목욕탕은 한 곳도 없었다고 권미혁 의원은 밝혔다.

경찰은 교대와 야간근무가 잦아, 정원에 맞는 화장실과 샤워실, 당직실, 목욕탕 등 편의 시설이 있어야 한다. 권미혁 의원은 경찰관서 업무 처리편람에 따라 경찰청과 지방청의 경우, 여경·여직원 휴게실은 1~4인 기준 15m², 목욕실(남·여)은 '인원 x 1.5m²'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법종 기자

농진청, 지역특색 살린 와인 첫 선

9개 농가서 사과·산딸기 와인 등 출시

농촌진흥청이 지난 2016년부터 '고품질 과실주 제조 기술 시범사업'을 통해 전국 9개 농가에 와인 블렌딩 기술을 지도한 품질 좋은 와인을 9일 선보였다.

블렌딩 와인은 여러 품종의 포도를 섞어 만든 것으로, 산미와 당도를 적절하게 조절해 부드럽고 품미가 좋은 와인을 만들 수 있다.

농진청은 영농활용기술인 '개량머루와 MBA, 캄벨리 혼합와인 제조 방법'으로 산도·당도에 따른 혼합비율과 숙성 시기를 기술 지원해 적정 산도 0.6% 내외, 알코올 11%인 와인을 생산했다. 또한, 생물을 제거하고 혼합한 다음 숙성시켜 블렌딩 와인의 활용도를 높이기도 했다.

이번에 9개 농가에서 선보인 와인은 사과, 산딸기, 아로니아 등 지역 농산물을 활용해 지역 특색을 살렸다.

기술을 지도 받아 너브내 와인을 생산



경남 의령 블렌딩와인.

하는 강원도 흥천의 농가는 "블렌딩 기술 적용을 통해 와인의 맛을 한층 더 깊고 풍부하게 보완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레드시드르를 생산하는 충북 충주의 농가도 블렌딩 와인 상품 판매로 농가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됐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세나 농진청 농업연구사는 "지역 농산물을 활용해 만든 국산 블렌딩 와인이 다양하게 개발돼 소비자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최신용 기자